

중국경제현안

브리핑

제02-16호 / 2002년 2월 2일

부시 美대통령 訪中 성과와 中·美관계 및 한반도정세 전망

1. 중·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 지난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부시 美대통령이 일본, 한국에 이어 중국을 방문, 장쩌민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현안 및 주요 국제 이슈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음.
-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반테러 협력, 한반도 정세, 경제협력, 무기확산 방지, 인권문제, 대만 문제 등이었음.
 - 반테러 문제와 관련, 양측은 중장기적인 교류 및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키로 했으나, 중국은 이라크, 북한체제에 대한 미국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했음.
 - 한반도 정세와 관련, 양측은 한반도 평화 및 남북 화해의 당위성에 공감하면서 접근 방식에 있어 입장의 차이를 보였음.
 - 장쩌민은 대규모 난민 유출이나 군사적 충돌 없는 점진적인 한반도 통일, 남북한 당사자 주도에 의한 통일을 재차 강조했으며, 북한의 체제나 인권 문제를 문제시 삼는 것은 내정간섭이라는 입장을 보임.
 - 부시는 대북한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강조하면서도 북한 체제가 불투명하고 인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유지하는 불량국가라는 기존의 강경

자세를 견지함.

- 부시는 장쩌민에게 미국측의 대화 의사를 북한측에 전달해 줄 것을 부탁했으며, 이에 대해 장쩌민은 확답은 하지 않았으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
- 경제협력 문제는 22일 주룽지 총리와의 조찬 석상에서 주로 논의되었는바, 중국의 시장개방 약속 이행 문제, 금년중 양국간 경제, 무역 및 과학기술 공동위원회 개최, 미국의 대중 大豆 수출문제, 유전자변형식품 관련 규정 등에 관해 논의하였음.
- 무기 확산과 관련, 미국측은 중국측에 대해 북한, 이란, 이라크를 대상으로 미사일기술통제협정에 기초한 무기수출통제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하였으나, 중국의 반대로 무산되었음.
- 중국내 종교의 자유, 인권상황에 대한 부시의 문제 제기에 대해 장쩌민은 중국은 명백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모든 중국인은 신앙에 앞서 국가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반박하였음.
- 대만문제와 관련, 부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면서도 ‘대만관계법’ 준수 방침 강조 등 대만에 대한 배려를 재천명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중국과의 현저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음.

2. 부시 美 대통령의 방중 의의와 성과

- ☐ 중국정부 및 국내 언론은 부시 미 대통령의 이번 방중 의미와 성과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
- 장쩌민 주석은 이번 부시 방중이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충실하고 성과가 컸다고 평가
- 신화사 통신은 이번 부시 방중이 30년 전 중·미 관계에 획기적인 돌파구를 연 닉슨 대통령의 방중과 같은 날 이루어진 점에 특별히 주목, “중·미관계의 과거

와 미래를 잇는 중대한 방문”이었다고 논평

- 중국신문사는 부시 방중이 ▲장쩌민 주석(금년 10월)과 후진타오 부주석의 방미(가까운 시일내) 확정, ▲반테러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양국간 협력 강화, ▲‘하나의 중국’ 정책과 3개의 중·미 공동선언 원칙 준수, ▲금년내 양국간 경제·무역 및 과학기술 공동위원회 개최 확정, ▲부시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이해 심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

□ 결론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중·미 양국은 세계 경제 및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대 대국으로서 공조의 필요성을 재인식, 소위 ‘求同存異’(상이점을 존중하고 공통점을 확대 발전시켜 나감)를 바탕으로 긴밀한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는 원칙을 재천명 하였음.

- 그러나 경제협력과 반테러 협력을 제외한 여타 사안, 즉 대만 문제, 북한체제에 대한 평가 및 한반도 문제 접근 방식, 인권 문제, 무기확산 문제, MD 문제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측 모두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구체적인 해결방식을 둘러싼 대립 소지를 남겨 놓고 있음.

3. 中·美 관계 전망

□ 부시 방중을 계기로 적어도 2004년 美 총선 이전까지 향후 2년간 중·미 관계는 협력이 기초를 이룰 것임.

- 중국측은 이번에 부시가 작년 10월 상하이 APEC 회의 참석 이후 4개월 만에 재방문한 것에 대해 미국의 중국 중시 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부시 집권 초기의 대중국 강경자세가 완화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가장 민감한 이슈인 대만 문제와 관련, 부시 행정부의 입장에 대해 중국내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기존 대만정책의 틀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중국의 인식임.
- 부시의 대만 관련 발언은 중국을 겨냥하기보다는 미국내 공화당 강경파에 대

한 무마용이라는 견해도 있음.(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진찬룡 박사)

-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안별로 구체적인 해결 방식을 둘러싼 대립의 소지가 있는바, 양측이 가장 공감하고 있는 반테러 협력에 있어서도 미국이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UN의 역할과 비군사적 수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한편,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사업기회 확대, 중국의 경제구조 개혁과 지속 성장에 필요한 외자 유치 필요성 등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은 금후로도 견실한 발전추세를 지속할 것임.

- 2001년도 중국의 대미 수출은 543.2억 달러, 수입은 262.0억 달러로 미국은 중국의 첫 번째 수출국, 세 번째 수입국이며, 전체 교역규모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 교역국임.

<표 1> 미국과 중국의 교역 현황

(단위: 억 달러)

	1997	1998	1999	2000	2001
교역 총액	469.9	545.5	615.1	745.1	805.2
수출	306.9	375.5	420.2	521.4	543.2
수입	163.0	170.0	194.9	223.7	262.0
무역수지	143.9	205.5	225.3	297.7	281.2

자료: 중국통계연감 각 연도판

<표 2> 미국의 대중 투자 추이(실행액 기준)

	1996	1997	1998	1999	2000
금액 (억 달러)	34.4	32.4	39.0	42.2	43.8

자료: 중국통계연감 각 연도판

4. 한반도 정세 전망

- 부시는 이번 한·중·일 3국 순방 기간중 한국의 “햇볕정책”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조건 없는 대북 대화 의지를 천명하면서도 북한 체제와 김정일 정권에 대

한 강경자세를 견지함으로써 금후 북·미 관계는 상당 기간 경색될 전망이다.

- 중국내 상당수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같은 대북 강경자세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대를 견제하고, 남북 대화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음(국제문제연구소 도병을 학술위원, 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진찬룡 박사).

□ 반면 북·중관계는 금후로도 안정 기조가 지속되고, 북한은 중대 사안에 대해 중국과의 대화 채널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은 연초 부시의 북한을 포함시킨 “악의 축” 발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KEDO 협상에 있어서도 북한측 입장을 옹호하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의 타국에 대한 내정불간섭 원칙과 북한체제의 특수성으로 미루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임.

□ 금후 남북 대화의 진전은 북·미 관계의 진전 여부와 북한의 대응 자세, 우리 정부의 협상 방향에 의해 좌우될 것인바, 미국의 강경 자세 지속과 북한의 “미국과의 대화 불가” 천명 등으로 상당기간 소강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음.

- 최근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거부를 선포함과 동시에 남북간에는 최고위층에서 실무급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대화 가능성을 제안한 바 있으나, 북미관계 개선과 남북관계의 진전을 병행시킨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임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은 낙관하기 어려움.
- 결국 북·미 대화에 획기적인 진전이 없는 한 김정일 답방은 물론이고 금강산 관광사업, 경의선 연결, 개성공단 개발, 시베리아 가스관 연결 등 남북 경협사업의 추진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음.(***)